

야권, 3번째 '김건희 특검법' 14일 처리 예고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재표결
수사대상, 두번째보다 6개 늘어
집회·서명·녹취록 추가 등 압박
국힘 '특별감찰관' 내세워 맞붙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별검사법'의 이번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3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기존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더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 대상만 두 번째 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개다.

"11월은 특검의 달"이라고 선언한 민주당은 국회 안팎의 여론전을 강화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오는 16일에도 3차 김건희 특검법 수용 장외 집회를 열고, '특검 수용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 등이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무기명 재표결 때 여당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장외 집회와 '1000만인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여론전과 명태균 씨 녹취록 추가 공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내 농성 뿐 아니라,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에는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한 경우,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여당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친한동훈(친한)계 일각에서 나온 제3차

추천 방식의 특검 등도 논의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 줬다.

국민의힘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당 내 이탈 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와 특검 야당 추천 권한 등도 얼마든지 협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수용 압박에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 표결 처리 예정일인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윤계가 합의한다면 특검법 재표결에 대응할 단일대오 유지 카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오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며 수용 의사를 내비쳤고, 한동훈 대표는 다음날 "당은 즉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호응한 바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주철현 "우크라이나 파병하면 임기 단축 사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사진)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 위원회에서 "다수의 언론과 헌법학자들이 우크라이나 파병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경대 임지봉 교수에게 의뢰한 '자문보고서' 결과를 파병의 위헌 근거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임 교수는 국군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인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 수준



인 훈령으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어 법률에도 위배되는 '위헌·위법한 훈령'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또 "국방부장관이 참관단이건 전환분석팀이건, 국회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견하는 해외파병 결정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헌법 제 60조 제 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해외파병 결정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전남도당, '김건희-윤석열 특검 촉구' 서명운동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국정농단 진실 파헤쳐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전남도당 발대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오후 목포 유달회관 목포평화광장점 앞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전남 중·서부권 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이계호,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의원과 민형배 의원 등 전남지역 지방의원들과 당원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한솔 전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며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 여사의 뻔뻔한 형태와 정치검찰을 등에 업고 민생을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독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위원회 국회의원들 또한 릴레이 발

언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켜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 3년도 되지 않아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국력은 추락해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정농단 배후를 밝혀내 민생과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잡자"고 강조했다.

농민들도 "쌀값 20만원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민생과 농심을 철저히 외면한 윤석열 정권은 내리고 쌀값은 올리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발대식 이후 전남 10개 지역위원회에서 천만인 구가 많은 주요 3개 이상의 거점에 부스를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전남 초선 의원 5명 '이재명 특보단' 합류

55명 규모 매머드급 조직 인선 완료 조인철·권향엽·문금주·조계원·전진숙

광주·전남 지역 초선 국회의원의 5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좌할 특보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1, 2차로 나눠 55명으로 구성된 이재명 대표 특보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특보단에는 광주·전남지역 의원 5명이 들어갔다.

기획재정 특보에 조인철, 여성가족 특보 권향엽, 지역언론 특보 문금주, 민생 특보 조계원·전진숙 의원 등이다.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은 안규백 의원이 맡았다.

△사회단체장 송기현 △국민소통단장 박수현 △외교안보단장 위성락 의원 △정무단장 안호영 △경제단장은 유동수 의원이 맡았다.

당대표 특보단은 원내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특보단을 통해 국회와 당, 그리고 당대표의 화학적 결합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은 "특보단은 그 역할에 걸맞게 당대표를 보좌하며 민생과



조인철



권향엽



문금주



조계원



전진숙

당의 미래 가치 도모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특보단은 △법률특보 김기표, 이성운 △복지특보 김남희 △여성가족특보 권향엽 △미래비전특보 차지호 △자치분권특보 염태영 △한인동포특보 이재강 △지역발전특보 이재관 △검찰대응특보 김동아 △문화특보 강유정 △노동특보 박해철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소통특보단은 △방송통신특보 이정현 △시민사회특보 박민규 △국민회합특보 박용갑 △재외국민특보 이기현 △장애인특보 서미화 △지역언론특보 문금주 의원 △지역소통특보 이문순 전 행정관 △시민소통특보 남종섭 전 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의회 대표 △소통정책특보 이희수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이다.

외교안보특보단은 △국방안보특보 부

승찬 △보훈특보 김용만 △국가정보특보 박선원 의원 △국방개혁특보 황인권 전 2작전사령부 사령관 △방위산업특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으로 꾸려졌다.

정무특보단에는 △디지털전략특보 전용기 △정무특보 안대준 △전략특보 김현정 △기획특보 정을호 의원이 임명됐다.

경제특보단은 △민생경제특보 흥기원 △기획재정특보 조인철 △과학기술특보 황정아 △국토교통특보 손명수 △서민경제특보 박홍배 △소상공인특보 오세희 의원이다.

안규백 단장 직속으로 운영할 민생특보단에는 복기왕, 허종식, 허영, 김영환, 송재봉, 채현일, 이상식, 문대림, 장종태, 조계원, 박희승, 허성무, 전진숙, 임미애 의원과 이강진, 전은수 지역위원장이 임명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이번 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오는 15일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진행된 결심 공판

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수년간 박탈된다. 반면 벌금이 100만원 이하로 나올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위증교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시스